

전남지역 설연휴 화재사건 많다... '부주의 원인'

설연휴 화재 평균보다 3.5건 많아

화재원인 부주의가 70.6%로 최다

최근 3년 간 전남지역의 설 연휴 화재 발생 건수가 평균보다 3.5건 많고 원인 대부분은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남지역 설 연휴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총 126건으로, 이에 따른 인명피해는 8명(사망 3명·부상5명), 재산피해는 약 7억4000만원 발생했다. 최근 3년 간 일일 평균 화재발생 건

수는 7건인 데 반해 설 연휴기간 일일 평균은 10.5건으로 3.5건이 많았다.

설 연휴기간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7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기적 요인 15%, 기계적 요인 8.7% 순이다.

전남소방본부는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안전컨설팅을 추진하고 설 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가 대응역량을 강화 할 방침이

다. 이를 위해 판매·물류·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50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와 함께 펜션, 모텔 등 소규모 취약건축물 71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화재 취약 주거시설 38개소에 간부급 소방공무원이 주 1회 이상 현지 방문하는 등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전통시장은 관계인 주도의 화재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야간 취약시간대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이 수시로 화재예방 순찰에 나선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385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화

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모든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관서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공인·묘지 등에 소방인력과 차량을 배치, 신속한 출동체계를 확립한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연휴기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며 "안전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직원들이 사전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미얀마 군부정권 퇴진 촉구하는 미얀마 청년들

재한 미얀마 청년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광주교육청, 횡령 등 혐의 D학교법인 전 이사장 고발

법인감사 2명 승인 취소

관련 교직원 중징계 요구

광주교육청이 D학교법인의 회계 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을 감사한 끝에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진행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지급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이 학교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송비용 1억5900여 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업무추진비와 예비 집행기준 미준수 사례도 43건(645만원)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

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한 교직원 2명은 중징계·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아울러 14명에게 주의, 10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 정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선욱기자

뇌물 받고 절도사건 덮어준 경찰관, 2심도 집행유예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추징금 3만4931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A씨가 1심에서 받은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A씨에 대한 벌금과 추징금 규모를 줄였다.

검찰은 당초 A씨가 받은 뇌물 500만원의 이자를 A씨의 대출이자율(연 27.9%)을 적용·계산했으나 항소심에

서 민법(연 5%)을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A씨는 전남 목포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년 2월3일부터 4월17일 사이 절도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계좌로 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B씨가 '차량에서 지갑을 훔치려던 게 아닌 장난을 치기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자 합의서를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A씨는 이후 '합의서가 들어와 사건을 종결해주겠다. 사정이 있으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송금받은 이후에는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에 접속, 피의자로 정식 입건돼 피의자 신문조사 작성을 마친 B씨에 대한 범죄 인지를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절도 사건 피해자가 A씨의 친척이고, 장난치기 위해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 요인 신고로 잘못 입건된 사건'이라는 내용의 허위 수사 보고서를 냈다.

A씨는 사건을 다시 입건 전 단계인 내사 단계로 되돌린 다음 '혐의 없음'을 이유로 내사 종결 처리한 뒤 5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줬다. A씨는 51일 동안 사건 무마 대가로 자신이 갚아야 하는 이자에 준하는 뇌물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정기자

'여친 소개' 음란행위 유도·협박해 90만원 갈취

특 대화방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한 후 찍은 사진을 넘겨받아 금품을 뜯은 '몸캠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최근 특 대화방을 통해 나체 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9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지난 4일 한 포털사이트 특 대화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B씨가 '여친 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나체사진과 음란행위 사진을 요구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B씨가 지인들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했

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A씨는 전날 90만원을 송금한 후 추가 피해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피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전문사이버 수사팀과 공조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